김기현·이재명 대표연설 국회 진검승부

金 "외교 성과, 경제·사회 큰 결실"
李 "실패 인정하고 새로운 길 가야"
尹 정부 1년 평가 등 놓고 대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각각 19일과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진검승부를 펼친다.

이들 여야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 비전과 추진 과제를 소개하며 여론에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대표가 지난달 말 합의한 공개 토론 및 회동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이번 '연설 승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중심으로 연설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로 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부실'로 규정하고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복기할수록 그냥 넘어갈 게 하나도 없다"며 "(이 대표가) 이태원 참사 대응과 외교 참사, 그에 따른 국익 훼손 등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실제 지난달 경북 구미 등에서 진행한 당원 간담회에서 현 정부를 향해 "실패를 인정하고, 판단과 정책을 바꿔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한 바 있다.

당시 언급에서도 나왔듯 이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단순히 비난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발목을 잡는 세력이 아닌, 원내 제1 정당으로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취지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고,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사회' 구상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기구 수장에 임명하고 기구 운영의 전권을 위임한 만큼 당 혁신 의지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취임 후 당 대표로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성과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정상화 등 외교 성과를 냈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노동 개혁 추진, 민간 주도 성장 기반 마련 등 현 정부가 경제·사회 분야에서도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의원정수 감축, 세비 감축을 위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대표는 여소야대 상황 속 국회 권력을 쥔 야당에 국정 운영 협조를 구하는 내용도 연설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정통 보수의 가치 등을 부각하면서 자랑스러운 보수의 자긍심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최근 외부 일정을 줄이고 연설문 초안을 놓고 수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루 먼저 이뤄지는 이 대표 연설을 듣고서 수정 작업을 마무리해 최종본을 완성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위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협의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 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당정 "해양방사능 조사 확대…수산업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가짜뉴스·괴담 실시간 모니터링"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유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조사 지점은 연안 52개에 75개를 추가하고, 원근해 40개에 33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할 방침이다.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의 유통 전(前)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수산업계 경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자와 원금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나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일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 사이트와 협업해 검색어 입력 시 수산물 해양 방사능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어판장에 방사능 지수를 보여주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범죄자 현재 모습 '머그샷' 공개 추진

당정 '묻지마폭력'도 신상공개
"'부산 돌려차기' 등 심각성 인식"
대상 확대 특별법 신속 제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당정은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 "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소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한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힘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 체제 전환 시동
내달 21일까지 새 시·도당위원장 선출 완료

수도권 인선 순탄치 않을 듯
10월 당무감사·연말 공천 작업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체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우선 다음 달 시·도당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광역 시도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시·도당위원장은 당무감사 때 의견을 내고, 지역 인재 영입에도 주도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자리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내달 21일까지 새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완료한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당위원장들이 다음 달 25일 1년 임기를 마치는 만큼 서둘러 인선을 마무리해 총선 준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는 인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들이 지역구 선거 운동에 더 집중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존재감 측면에선 총선에서 유리한 면이 있지만, 본인 선거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불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현 위원장인 유경준 의원 임기가 8월 초까지여서 다른 곳보다 시간 여유가 있다.

관례상 시당위원장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지 않은 현역 중 김웅(송파갑)·조은희(서초갑)·전주혜(비례대표)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배현진(송파을)·조수진(비례대표) 의원도 있지만, 각각 사무부총장과 최고위원을 맡고 있어 겸직하진 않을 거라는 분위기다.

원외 인사가 도전장을 던진다면 경선이 불가피하다. 작년에도 유 의원은 김선동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다.

경기도당에서는 현역 의원 중 도당위원장을 하지 않은 안철수(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이 거론됐지만, 안 의원 측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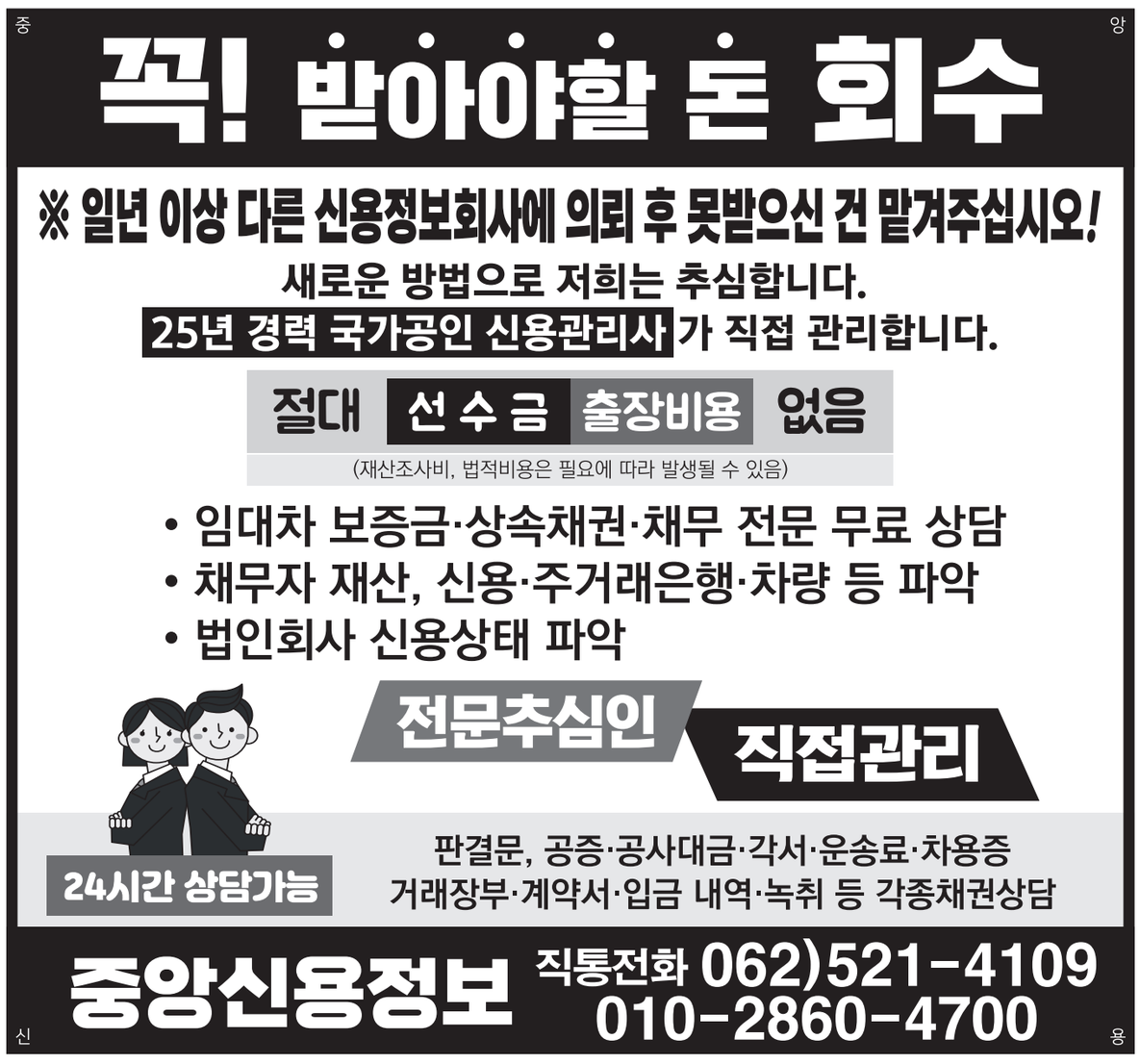
김선교 전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1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반대 의견이 있다. 부산시당의 경우 초선인 전봉민(수영) 의원이 현재 직무대행이지만, 부산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지휘하려면 중진급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선인 장제원(사상)·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이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어서 시당위원장까지 맡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단수 후보로 교통정리가 얼추 마무리된 시도당도 있다. 경남도당위원장에는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유력하다. 창원에 있는 도당 활동과 선거 운동을 병행하려면 지역구가 창원인 최 의원이 해야 한다고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의힘은 하부조직인 당협(당원협의회) 정비에도 나선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다음 달 말까지 사고 당협 37곳 중 15곳가량만 위원장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전 인재 영입을 위해 일부 당협은 비워둔다는 전략이다.

태영호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과 노원병의 경우 사고 당협이지만, 새 인물을 채우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평가 지표로 활용될 당무감사는 10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시기를 이맘때로 잡은 건 '잡음 최소화' 속내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를 통해 자격 미달인 당협위원장을 추가로 걸러내고, 새 당협위원장 체제를 꾸려 연말부터 공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